민주 '정권 심판론'으로 북풍 차단

수도권 빅3 지지율 하락에 지도부 대여 공세 나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천안함발(發) 북풍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전력을 기울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황 반전에 나섰다.

천안함 사태로 안보위기론이 부각, 심판론이 희석되면서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면적인 대여 공세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지원유세 일정을 변경,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강력 비판했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무능한 군 통수권자"라고 비판하면서 "국민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장병의 희생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전이 본격화됐지만 수도권 빅3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천안함 정국의 여파로 심판론이 힘을 받지 못하자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선거전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정부 조치에 대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날짜를 짜맞췄다" "선거가 지나면 표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여 공세에 공을 들였다.

손학규 전 대표도 이번 주 내에 호남에 들러 취약지역에 대해 지원유세를 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흐르면서 잠정적으로 호남행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차원에서 집회도 계획하는 등 정부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전력을 집중키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지역을 우선 공략지역으로 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수도권 최대 접전 지역인 인천으로 직행했다. 정 대표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현장 방문, 남동공단 기업체 오찬 간담회, 부평역 및 신기시장 지원 유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이명박 정권 심판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부평역 유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만 무능한 줄 알았더니 천안함 사고를 내는 것을 보니까 안보도 무능하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기호 2번 송영길을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박빙 지역인 인천 등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은 뒤 그 여세를 몰아 서울과 경기에서도 역전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천안함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2~4% 포인트씩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고 인천의 경우 실향민이 많아 부분적으로 빠졌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이 북풍몰이를 한 것에 비하면 충격이 큰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볼 만한 싸움이란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가 25일 순천 북부시장을 찾아 한 상인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저에게 주는 1표는 민주당 후보의 5표 가치 낙선돼도 중앙에서 '명예 지사' 역할 하겠다"

김대식 한나라 전남지사 후보 '2명 도지사론' 눈길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가 '2명의 전남지사론'을 제기해 지역정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25일 순천 북부시장 유세에서 "만약 전남도지사 선거에 낙선하더라도 전남도민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 고향 전남 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지원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앙 전남지사'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도지사는 도민의 민생을 챙기고 김대식은 중앙에서 예산과 현안사업을 챙기는 명예 전남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네 분 중 한 분만은 저를 지지해 줘 저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저에게 오는 한 표는 민주당 후보에게 가는 5표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전남 도민의 열린 마음이 중앙 정부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의 '2명의 전남지사론'은 그동안 그가 여러 차례 밝혀왔던 '낙선되더라도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최소한의 힘, 지역민들의 전략적인 투표를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軍, 천안함 침몰 당일 '어뢰 피격' 보고받아

해군이 천안함 침몰 당일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민·군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천안함이 가라앉고 있던 지난 3월26일 밤 9시49분 해군 모기지에 근무하던 이모 상병은 천안함 통신장 허순행 상사로부터 '어뢰 피격으로 침몰'이라는 상황을 전파 받았다. 허 상사는 당시 휴대용 무전으로 "어뢰 어뢰, 어뢰로 판단된다"며 다급한 상황을 이 상병에게 전했다.

그날 밤 10시32분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도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에 피격당했다며 구조를 요청했고 밤 11시50분에는 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밤 11시59분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직후 군은 이미 어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침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안함 인양 등 소요경비 395억원 예비비로 지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소요경비 39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함정 인양장비 임차료 등 직접 소요경비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소요액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함정인양비 임차료 및 민간 잠수·구조요원 경비 등에 95억원, 영결식 비용 및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비에 21억원, 탐색·구조장비 등 우선적 확보가 필요한 장비·물자 보강에 236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금양호 선체수색비, 수색구조 관련 장비 구입비 등에 43억원이 지원된다.

/연합뉴스

"김정일,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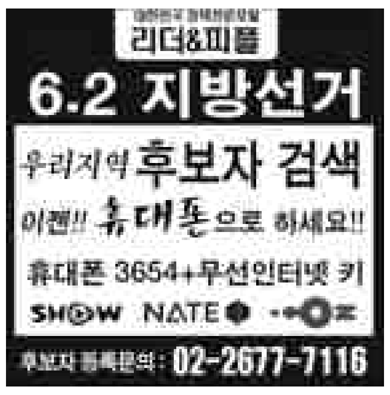
탈북자단체, 오극렬 담화 통해 밝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민군과 전 민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5일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던 20일 오후 7시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3방송'은 각 가정의 스피커로 전달되는 '유선 라디오 방송망'인데, 북한 당국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주민들한테만 전달할 때 이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미-중 팽팽…불붙는 '천안함 외교전'

美 '제재동참' 압박 中 '신중론' 버티기

정부의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 발표를 계기로 '천안함 외교전'이 불붙고 있다.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수순을 밟으려는 한·미·일과, 이에 맞서 신중론을 펴고 있는 중·러의 외교적 대치전선이 그 중심축이다.

특히 동북아 역내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G2(미·중)의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어 외교전의 열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외교전의 향방은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24일 방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26일 방한 ▲28일 한·중 정상회담 ▲29~30일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거치며 큰 틀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대중 압박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전략경제대화에서 클린턴 장관은 "미·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천안함 사건을 고리로 대북 제재국면의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의도가 읽히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 같은 기세를 이어 2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미간의 보폭을 조율할 예정이다.

중국은 여전히 신중론으로 버티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불행한 일'이지만 사후 처리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